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혜문 스님
문화재 제라리찾기 대표

학창 시절 도산서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거짓을 행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했던 조선시대 울곧은 선비정신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원 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그려졌던 나무 ‘금송’을 기억한다.

금송의 표지석에는 “이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청와대 집무실 앞에 심어 아끼시던 금송으로서, 도산서원의 경내를 더욱 빛내기 위해 1970년 12월 8일 손수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거기서 나는 친구들과 유명한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남아 있다.

2011년 나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도산서원 관련 파일을 읽다가 도산서원의 금송이 혹시 가짜가 아닌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결국, 나는 문화재청과 안동시에 도산서원에 심어진 금송이 박정희 대통령이 심

도산서원 ‘대통령 금송’은 가짜

은 나무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실 조화를 신청했고, 두 기관은 고심 끝에 ‘현 금송은 1973년 4월 22일 새로 구입한 것을 원위치에 재식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가기록보존소에 보존된 문서에 의하면,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금송은 2년만인 1972년 고사했고, 현 금송은 안동군이 당시 예산 50만 원을 들여 한국원에건물을 통해 1973년 심은 나무로 판명되었다. 대통령 기념식수가 관리소홀로 고사하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몰래 새 금송을 심은 뒤, 지금까지도 사실을 은폐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도산서원의 금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일본 특산종이란 이유로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었다. 금송은 금강송 등 소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낙우송과로 일본에서만 자라는 특산종이며, 한반도에는 자생하지 않는 식물이다. 일제시기 현 청와대 자리에 조선총독관저를 건립할 때, 총독부 관료들과 일본 군인들이 일본에서 옮겨다가 심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금송은 일본을 대표하는 나무이자 일본 황실과 사투라이 정신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폐 도안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금송이 40년간 지나치게 성장해서 도산서원의 경관을 가리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안동

시는 2003년 금송을 이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은 ‘대통령 기념식수’라는 이유로 도산서원의 금송 이전에 반대해 이전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 한 적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금송이 가짜란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40년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것인가? 또 안동시가 2003년 금송을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문화재청은 가짜란 걸 알면서 왜 대통령 기념식수란 이유로 이전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일까?

결국 2011년 12월, 문화재청은 금송 앞의 거짓말 표지석을 철거하고, 새로운 표지석을 설치했다. 바뀐 표지석에는 ‘이 곳은 1970년 12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청와대의 금송을 옮겨 심었던 곳이나 1972년 고사(枯死)됨에 따라 1973년 4월 동 위치에 같은 수종(樹種)으로 다시 식재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표지석 철거가 사건의 끝은 아니었다. 나는 또 다른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만약 금송이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아니라면, 일본 특산종 나무가 왜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문화재청은 안동시와 협의해야한다고 하고, 안동시는 도산서원과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도산서원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결국 사건은 진전되지 못했고, 부득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묻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오는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도산서원 금송 철거 여부를 놓고 첫 번째 심리가 열리게 된다.

논점은 2003년 안동시가 제출한 금송의 이전 승인신청에 대해 문화재청이 ‘대통령 기념식수’란 이유로 이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란 취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나무가 무슨 죄냐고? 말 그대로 나무에게 무슨 죄가 있랴! 이전 나무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君子)의 길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無自欺)’이라고, 대학(大學)에 나오는 이 귀절을 뒤겨 선생은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벽에 써놓고 실천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도산서원의 금송은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것이 아니라 안동 군수가 심은 가짜임이 밝혀진 지금, 도산서원의 금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다.

社說

광주호 독 높이기사업 ‘불허’ 옳은 판단이다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호 독 높이기사업에 대해 “강행 시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만수위가 1.1m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염정(명승 제57호)과 왕버들나무(천연기념물 제539호)를 포함한 반경 500m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침수돼 유실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신청한 ‘문화재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허’를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심의에서 불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문화재청은 한발 더 나아가 “만일 농어촌공사가 독 높이기사업을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과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 높이기사업으로 가사·시가 문화권 내 경관과 문화재가 훼손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독 높이기사업으로 총 저수량이 기존 1736만m³에서 2325만m³로 늘어나게 돼 홍수예방과 연간 556만m³의 생태유지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광주호는 5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물 부족을 겪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바다 준설을 통해 저수용량을 높이는 것이 실의이 크다. 또한, 135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이 물에 잠긴다면 이 또한 예산 낭비다. 광주호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온 것도 이런 이유다.

농어촌공사가 사업 추진 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공사가 10%나 진척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농어촌공사는 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형세만 낭비할 뿐이다.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들 ‘지옥살이’라니

어린이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주 우치동물원의 ‘동물 복지’가 최악이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동물을 통해 자연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육하는 만큼 최소한의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들을 위한 행동’이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에 있는 일부 동물들은 좁고 답답한 우리 속에서 지내다 보니 본래의 야성을 상실한 채 이상반응까지 나타내고 있다. 코끼리의 경우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50km에 이르지만 우리는 고작 354m(107경)에 불과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코끼리들은 의미 없이 머리를 좌우로 반복해 흔드는 ‘정형행동’마저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맹수인 호랑이와 사자는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 번들적으로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으나 좁은 사육공간에선 은신처가 없어 불안해하고, 광활한 자연에서 지내는 본성을 억압 받고 있어 그 스트레스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먹이 가장 긴 기린은 자신의 눈높이에서 나뭇잎을 뜯어 먹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 바닥만 풀을 고개를 숙여 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사육사들의 편의에 의해 서식환경이 조성돼 동물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 측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것’까지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도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게 신경을 기울여야 정도로 시민수준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우치동물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동물들의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경외해야 할 동물원이 ‘동물 학대 현장’이라면 이는 분명 광주외의 수치다.

의료칼럼

피부암 식별 요령과 예방·치료



김민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60대 중반의 할머니 K씨는 코에 검은 점이 있었는데 크기가 커지고 색깔도 점점 짙어졌다. 한 번씩 상처가 생겨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반복돼 피부과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고 곧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해당 부위가 1cm 크기로 다소 작았으며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수술 후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장수사회가 도래하면서 암이 주요 관심사

가 되었다. 이중 피부암은 최근 서양에서는 5대암에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10대암에 포함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20~30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피부암은 얼굴, 목, 팔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찰이 쉽고 조기 발견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한 점이나 검버섯 혹은 만성적인 종기나 상처 등으로 치부해 방치하다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일이 많다. 최근 들어선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이 일상화되면서 피부암인줄 모르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피부암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유전적 요인과 자외선 노출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크게 ‘흑색종’과 ‘비흑색종’으로 나뉜다.

비흑색종은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이 대표적이지만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잘 퍼지지 않아 늦게 발견하

더라도 수술만 잘하면 거의 완치된다. 이중 기저세포암은 가장 흔한 피부암으로 전체 피부 악성종양 중 30~40%를 차지한다. 주로 눈꺼풀, 코 쪽, 눈 주석, 귀 뒤 등과 같은 얼굴 중앙 상부에 자주 발생하며 표면에 모세혈관확장을 보이는 작은 덩어리로 시작한다. 편평세포암은 기저세포암에 비해 재발이나 전이될 위험이 더 크다. 발생 부위는 대개 작고 단단한 덩어리로 시작하며, 넓적하게 융기된 형태, 사마귀 모양 또는 궤양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비해 흑색종은 멜라닌세포나 모반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으로 다른 암과 같이 전이를 잘하고 항암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흑색종의 20~50%는 기존의 용기형 흑갈색의 반점에서 발생한다. 가려움증이나 통증과 같은 자극 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검은 반점이나 작은 덩어리로 보여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자세한 육안 관찰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발

가락에 생기는 말단흑색점흑색종이 60% 정도로 가장 흔하다. 기저세포암은 다른 장기로의 전이율이 0.1%로 매우 낮지만 악성흑색종은 전이가 가장 잘 일어나 예후가 나쁘다. 피부암을 식별하는 요령을 알아두면 오진하다. 원래 있던 점이 비대칭적으로 자라거나 색깔이 균일하지 않을 때, 가려움증과 통증이 동반될 때, 출혈이나 딱지가 반복되고 진물이 흘러 잘 낫지 않을 때, 원래 있던 점 주변에 작은 점이 나타날 때, 크기가 크고 경계가 불규칙한 모양일 때는 의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수술적 제거로 완치가 가능하며, 그중 ‘모즈미세도식수술’은 재발률이 평균 1~2% 미만으로 가장 효과적이다. 피부암 예방이나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60세 이후에 적어도 1년에 한번 피부과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상에서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자외선 강도가 높은 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가급적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며, 지나친 음주·흡연 또한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고

취득세율 인하여 앞서 지방재정 대책부터



강성희
전남도의회 의원

최근 정부는 지방의 재정수입 중에서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를 인하추진 방침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전 지자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내용도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를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사이에만 675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나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주택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반복해 왔다. 인하율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으나,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적용한 인하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율 인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올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올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어 실시시기는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는가 추측된다.

2013년 본예산 기준 전라남도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7120억원이고, 여기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9.0%로 34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만일 취득세 인하율을 올 상반기에 시행한 한시적 인하율과 비슷하게 결정한다면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675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된다.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주택거래 활성화도 경기 진작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OECD의 많은 국가들도 거세라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그때만 반짝하고 지속성이 없다는 점이다.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평소 부동산 거래를 감소시켜 주택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

더군다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른 재정보전 대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지방세수의 27%를 차지하고, 전남도의 경우 도세의 49%를 차지하는 취득세부터 손대는 정책은 문제다. 세금의 성격은 지방세인데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위압과락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2013년도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6%에 불과, 나머지 74%는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지방재정을 메우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감세, 복지제정의 지방 전가도 모자라 이번엔 지방세인 취득세까지 인하한다면 아예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지방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당면해선 연간 2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 : 5인 영유아 보육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최소 7 : 3으로 만들어 정부의 무분별로 실시에 따른 지방의 재정수입을 조공이라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교부세의 19% 선인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1% 선으로 올려서 지방재정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대책 없는 취득세를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전국시도회의의장단협의회에서도 입장 표명을 준비중에 있다.

전남도의회 지방분권특위에에서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관련 부처인 안행부, 기재부, 국토교통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이 정부 부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취득세를 가지고 광역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보조금 재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초단체장협의회 및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에도 입장을 밝히고 함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남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취득세를 인하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안되는 조산아 치료비 대책 시급하다

친동생이 얼마 전에 임신중독증으로 34주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조산을 한 것이다. 요즘 여자들이 나이 들어 늦게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조산아를 낳는 일이 많다고 듣기는 했는데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막상 닥치니 놀라고 겁도 없다.

그런데 걱정은 정말 현실이 되었다. 너무 일찍 나온 아기가 과사상 장애에 걸려 처음 일주

일 병원비만 240만 원이 한계선에 나왔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치료비가 5000만원이나 나왔다. 병원비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는지 몰으나 조산아들의 치료제가 고가이고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서라고 한다.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앓는 조산아에게 필요한 동맥관 치료제는 1회 주사비용만 70만원이나 됐다. 이는 건강보험이 안돼 부모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 배 아파서 낳은 아기가 병에 걸렸는데 지원도 안되니 비싸다고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나.

동생은 시택 쪽에서 돈을 좀 보내주고 동생 부부가 맞벌이하러서 모은 약간의 여유돈이 있어서 아기를 치료했지만 웬만한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낳자마자 몇천만원씩 하는 병원비를 맞닥뜨린다면 무슨 수로 치료를 할까. 거기다가 출생 당시부터 중환자실 신세를 진 뒤 그결과 끝나는 게 아니라 퇴원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

치료비가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이다. 조산아를 살린 병원에서는 아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을 죄다 털어서 썼고, 또 앞으로 다가가 병원이란 곳에서 막막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늦은 출산에 조산아가 많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매번 걱정하는데 이런 조산아 문제와 치료비 대책도 저출산 대책에 함께 넣어서 조산아를 살리면서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정동

無 等 鼓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 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지난 3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안하무인적인 자세 탓이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업계 단체인 컴퓨터 통신산업연합회(CCIA)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의신들도 IT기업의 공정한 경쟁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념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도 “미 행정부는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국 이해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 자유무역은 나라마다 가진 생산

요소를 간의 다른 비율로 인한 비교우위가 생기는 점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어느 국가든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보다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생산물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럴 때 자유무역을 통해 두 국가 모두 생산과 소비가 극대화된다. 하지만 공정한 자유무역주의를 위해서 전제돼야 하는 호혜평등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산업에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무역장벽을 설치하거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특허 소송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의 재선과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재정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됐지만 한국 IT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보호무역주의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구암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2200-515 222-8005 (F A X 227-0195)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2200-555 (F A X 02-773-9335)	2200-541 222-8005 (F A X 227-0195)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